

Vol. 29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2. 7. 25.

■ 정책동향

-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 새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본격 추진
-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
- 섬·연안 생물자원 식품 산업화 위한 공동협력 추진
-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식량안보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수확기 중점관리 시·군 중심 공공 인력공급 확대 지원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발작물 물가안정 강화
- 농림식품신기술(NET) 4건 신규 인증
- '산촌관계인구' 개념 정의 및 대응책 마련

■ 아젠다발굴

- [기획] 트렌드 |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 [기획] 디지털 | 디지털 및 그린 직업정보
- 이슈 브리프 | OECD ESG 투자원칙 제정 동향 및 전망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재해지원프로그램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지역 활성화 기업인 증가
- 언론 동향 | 농업 속 ESG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정책동향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21.)

□ 개요

- [농식품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 2022.7.21.]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을 위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2022~2026)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①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② 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③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④ 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9,259억 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

┃ 추진 전략 및 과제 ┃

비전	◆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목표	◆ 혁신·글로벌화·상생으로 외식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① 푸드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2021) 0개 → (2026) 10 ②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2021) 1개 → (2026) 5 ③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2021) 3,409개 → (2026) 5,000								
추진 과제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략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td> <td> ①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③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략 2] 세계가 찾는 K-외식</td> <td> ④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체계 구축 ⑤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촉진 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략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td> <td> ⑦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⑧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⑨ 외식업계 ESG 경영 확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략 4]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td> <td> ⑩ 위기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⑪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⑫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td> </tr> </table>	[전략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①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③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전략 2] 세계가 찾는 K-외식	④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체계 구축 ⑤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촉진 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전략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⑦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⑧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⑨ 외식업계 ESG 경영 확산	[전략 4]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⑩ 위기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⑪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⑫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전략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①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③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전략 2] 세계가 찾는 K-외식	④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체계 구축 ⑤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촉진 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전략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⑦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⑧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⑨ 외식업계 ESG 경영 확산								
[전략 4]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⑩ 위기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⑪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⑫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체계	◆ 업계·전문가 등 정책 고객 중심의 외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 ①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R&D 및 상용화) 부가가치 제고, 인력난 극복, 경영효율화 등 혁신을 위한 푸드테크 R&D 지원 강화 및 신기술 보급 촉진*
 - ※ 푸드테크 R&D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 보육 지원,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투자 판로 등 지원(2022~)
 - ※ 스타트업 기업-외식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제품 시범 운용 및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 시 신기술 상용화 제품 우선 활용(~2023)
- ②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 (스마트 기술 보급) 지역별 외식거리에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을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 조성(2024~)
 - (데이터 경제 확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경영 개선을 돕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2024~)
 - ※ 개별 음식점의 카드 거래, POS 데이터, 배달앱 이용정보 등 정보 결합을 통해 선호 메뉴·비용 구조·고객 분석을 통해 경영 개선 도모
- ③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 (규제 개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푸드테크 상용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을 위해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2023)
 - ※ 외국인력(H2비자) 취업허용 업종확대(한식·중식 등 6개 →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 등(2023~)
 - (기업·인재 육성)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공 인력을 실무형 인재로 육성(2023~)

2. 세계가 찾는 K-외식

- ④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체계 구축

㉔ 정책동향

- (맞춤형 지원) 국내·해외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여 단계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바이어 매칭 등 단계별(예비진출~현지화) 맞춤형 지원(2024~)
- (정보제공 개선) 매월 국가별 외식시장 동향, 식문화, 소스류 수출 통관정보 등 정보제공(연 1회 → 월 1회)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2022~)
- ⑤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추진
 - (해외 인지도 제고) 한류 콘텐츠(K-POP, K-무비·드라마 등) PPL, 해외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활용 및 여행사·항공사와 연계한 홍보 추진(2023~)
 - (기업 참여 확대) 외식기업 경영자 등 대상 해외 진출 실무 교육을 통해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역량 강화(2023~)
- 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 (서비스 경쟁력 강화) 외식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2023), 서비스 등급제 시범 운영(2024~)
 - (신시장 활성화) 가치소비 트렌드에 대응, 저탄소 농산물 이용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메뉴 출시와 소비 활성화 지원(2023~) 및 인증제 도입 검토(2024~)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 ⑦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 (직거래 활성화) eaT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2023년 구축예정)를 통해 외식 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2022~)
 - (특산물 등 상품화) 외식기업·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등록 농산물, 신품종 농산물 등 활용 메뉴 상품화 장려(2022~)
- ⑧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 (관광자원 연계) 지역 음식거리와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 홍보 강화, 코레일-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음식관광 상품 운영 지원(2022~)
 - (향토음식 대중화) 기업과 협력하여 농가레스토랑(농가맛집 184곳 등) 메뉴의 간편식(RMR) 상품 출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2022~)

㉔ 정책동향

- (기업·농촌 협력) 외식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외식업 관련 재능기부, 자원순환, 재난피해복구 등 다양한 협력 활동 장려(2022~)
- ㉑ 외식산업 ESG 경영 확산
 - (참여 확산) 외식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 및 각종 모범 사례 발굴·홍보(SNS 등 활용)를 통한 상생 경영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 관심 제고(2023~)
 - (ESG 경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K-ESG 가이드라인을 준용, 외식산업에 맞는 기준 마련(~2023) 및 평가 추진(2024~)

4. 포용과 참여로 함께 발전하는 외식산업

- ㉒ 위기 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
 - (위기 대응)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위기 시 대응 방안 및 영업 규모별 다양한 우수 경영사례 매뉴얼 개발·배포(2022~)
 - (경영안정)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컨설팅 및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속 지원을 통해 영세 외식업체 경영안정 지원
- ㉓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 (창업 교육 등)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및 매장 운영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기 생존 도모(2023~)*
 - ※ 창업 콘테스트 등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다양한 창업 성공 모델 확산
 - (재기 지원) 폐업 희망 사업자 대상 폐업 부담 경감 및 유망·특화 분야의 재창업 지원(2022~)*
 -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멘토링·자금 지원 등
- ㉔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컨설팅 및 현대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별 컨설팅 및 노후 가스·환기 설비 교체 및 개보수* 지원(2022~)
 - ※ 외식업체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 한도) 1개소당 1억 원, (금리) 2~3%

㉔ 정책동향

◆ 총괄 동향

새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2022.7.15.) · 국토교통부 · 환경부(2022.7.18.) · 외교부(2022.7.21.) · 통일부(2022.7.22.)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 2022.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7월 15일,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

※ ①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 미래 혁신기술 선점, ③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④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
 -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
- ※ 2022년 9월 선정(반도체·우주항공·AI 등 10개+a) ⇒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 포함 로드맵 수립(2023년)
-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도 병행

Ⅱ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조사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대형화)
조사기간	총사업비 차등 없이 9~11개월	총사업비 3,000억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사업내용	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	급격한 환경변화(코로나, 수출규제 등) 시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

2. 미래 혁신기술 선점

-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

㉔ 정책동향

-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 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
 -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
 -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
 -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을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
-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KAIST 나노중기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0여 개 나노 팹 연계, 교육·연구·기업 지원 등 강화

3.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추진
 - **(단기적)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
 - **(중장기적)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
- ※ 교육생 평가 → 타 교육과정 희망 시 온라인 테스트 면제, 추천서 발급 등 지원

4.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

㉔ 정책동향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
 ※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간편 청구, 부동산 거래 디지털화 등 추진

5.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
 -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세대(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 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
 -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강화

Ⅰ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7.15.]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15일,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① 노동시장 개혁, ② 중대산업 재해 감축, ③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

Ⅱ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과제

핵심 정책과제	추진 방향	주요 세부 과제
1. 노동시장 개혁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관행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7월~)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사회적 논의
	취약계층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공정채용 확산 •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근절 등) 준수 확산
2. 중대산업재해 감축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10월) •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 지원 확대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 양성(~2024) • 기업직업훈련 혁신(7월), 외국인력 신속 입국(5만 명) •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마련(2022.9월) •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 발표(2022.4분기)

㉔ 정책동향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새 정부 업무보고 실시, 2022.7.18.]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새 정부 5년간 ① **민생안정 및 경제 위기 극복**, ② **신성장 동력 확충**, ③ **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 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2022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핵심 추진과제	주요 세부 과제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출퇴근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 양성(~2024) • 기업직업훈련 혁신(2022.7월), 외국인력 신속 입국(5만 명) •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마련(2022.9월) •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 발표(2022.4분기)

환경부

- [환경부, 새정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2022.7.18.] 환경부는 2022년 7월 18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 (주요 내용) 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 ②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③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중전 △26.3%)

㉔ 정책동향

환경부 새정부 주요 업무보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p>과학적·실용적 기후변화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역할 확대, 배출 여유분 확보·활용 ·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로 실현 가능성 확보 	 <p>원전 활용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안전성 전제), 원전 대상 녹색금융 기반 마련 	 <p>탄소무역장벽 극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감축 지원
---	--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p>초미세먼지 30%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 	 <p>재해, 사고 없는 안심 물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 품질 실시간 감시·관리 · AI,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 홍수 대응 · 도시침수, 싱크홀 선제적 예방 	 <p>주민과 환경에 도움되는 과학적 하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활용성 제고 · 지역의 하천을 생태·문화·관광 명소화
--	--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p>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 및 재활용 확대 · 폐기되는 제품·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추출 	 <p>친환경 경영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기반 정립 · 녹색경제활동에 금융·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 환경성 확보 지원 	 <p>주요 수출분야 환경측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자동차 무공해차 임기내 누적 200만대 보급 · 석유제품 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
--	--	--

외교부

- [외교부, 2022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2.7.21.] 외교부는 2022년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7대 추진과제를 추진

㉔ 정책동향

▣ 2022년 외교부 업무계획 ▣

<p>1.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 확대 •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추구,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노력,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 - (중국)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 추진, ▲고위급 소통 및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한 한중 간 상생 발전 도모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우리 국민·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p>2.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p>3.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 선도 /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 참여 확대 •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추진
<p>4.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분야 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 경제질서 구축 주도 •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협력 강화
<p>5. 북한 비핵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추진 ⇒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담대한 계획' 추진 •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지속 모색
<p>6.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 정상외교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
<p>7.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 확충

▣ 통일부

- [통일부,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2022.7.22.] 통일부는 2022년 7월 21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정책 설계와 함께 집권 1년 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정립

㉔ 정책동향

┃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

비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
3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대 핵심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그린데탕트)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p>◆ (필요성) 기후 및 환경변화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 한반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저하로 인한 환경 재난 등은 남북 주민의 삶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 <p>※ 北, VNR(자발적국가보고서)(2021.7월)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사 표명</p> <p>◆ (주요 내용) 비제재 분야 상호 현안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자연재난·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 - 남북 접경지역(DMZ)을 대상으로 한 협력 추진 <p>◆ (당면계획) 남북 그린데탕트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및 중장기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계획 수립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관련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자료 : 보건복지부(2022.7.20.)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2022.7.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대응 추가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㉔ 정책동향

① 방역대응 추가대책

- ▶ 치료제 2022년 7월 중 94.2만 명분, 2022년 하반기 34.2만 명분, 2023년 상반기 60만 명분 순차적 도입 예정
-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주말·공휴일 운영시간 연장·확대 추진
- ▶ 지자체 전담대응 조직 운영으로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 ▶ 고위험군 방역 수칙 강화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 조성

② 의료대응 추가대책

- ▶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2022년 7월 말까지 1만 개까지 확대**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3,083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492개소(2022.7.20. 기준)
- ▶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등에게도 확대**
 - ※ (기존) 60세 이상·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입소자 → (추가) 기저질환자·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
- ▶ 2022년 7월 20일부터 진단검사 수요 증가 대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중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공휴일 운영 확대**
 - ※ (현재) 주중, 일과시간 내 운영 → (2022.7.20. 이후) 주말, 야간에도 운영
- ▶ 1단계로 전국 1,400개 이상의 병상에 대해 가동 준비 행정명령 발령, 단계적 병상 가동 추진**
 - ※ 일일 확진자 30만 명 발생 대비 약 4천여 개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추계
-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강화, 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조기 시행(2022.7.25.~)
- ▶ 2022년 7월 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 허용**
 - ※ (現) 2.3만 개 → (2022.7.20.~9.30.) 4.8만 개 편의점에서 판매 실시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본격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2022.7.19.)

- [행정안전부,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본격 추진, 2022.7.19.]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정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 대학 학과·교과 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 2022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의 영역에 공공행정 영역을 추가하여 총 21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
 - (주요 내용)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며, 분야별 데이터는 품질개선, 개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연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제공될 예정

㉔ 정책동향

▣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개요 및 기대효과 ▣

구분	데이터 (보유기관)	개방 내용	기대효과
금융정보 0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한국조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정보 개방 • (개방) 가맹점명, 지역코드, 업종분류, 대표전화번호, 가맹점주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창출 및 관련 사업 육성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자 편의 증대, 가맹점 홍보 등으로 소상공인·지역업자 지원 효과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금융정보 02	가맹사업 정보공개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의 허위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정보 등을 공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도모 • (개방) 가맹사업정보, 가맹 비교정보, 가맹 통계정보 등 가맹사업 정보 	▶ 가맹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벤처기업의 상권 분석 정보개발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금융정보 03	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주석 정보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사항 개방 • (개방)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매출 채권 및 미수금,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등 주석사항 개방 	▶ 재무제표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회사의 재무위험(우발부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에서 파악 등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판단 등에 활용
금융정보 04	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정보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비상장사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개방 • (개방) 비상장사의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사에 비해 정보수집이 어려운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개방함으로써 투자 결정, 위험평가 등 기업에 대한 평가 가능 ▶ 비상장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금융정보 05	국고보조금 통합정보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국고보조금 예산 및 보조사업 신청·계약·집행·정산 등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데이터 개방* ※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조 원) : (2016) 60.3 → (2017) 59.6 → (2018) 66.9 → (2019) 77.8 • (개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보조사업 서비스 유형별 현황(통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 제공 ▶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생활환경 01	숲길종합정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코로나19 이후 도시생활권내 숲길에 대한 이용수요 증가 관련, 숲길 정보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개방 • (개방) 국가 숲길, 문화자원 숲길, 자연경관우수 숲길, 건강효과 숲길, 위험지역 숲길, 야생동물 숲길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산림의 치유 효과를 통한 건강증진형 프로그램 적용 기대 ▶ 안전한 숲길 이용으로 휴양, 등산, 레포츠 경로 제공 등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

㉔ 정책동향

구분	데이터 (보유기관)	개방 내용	기대효과
생활환경 02	시드뱅크 종자·백두대간 식물 정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생물자원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 개방 • (개방) 수목원 도입 식생물 데이터, 시드뱅크 입고 종자 데이터, 백두대간 특화 생물정보(유용식물, 희귀/약용식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및 종자정보를 활용한 신규 의약품 및 식물 추출물 개발 생산성 향상 ▶ 반려식물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관리비용 감소
생활환경 03	SRT 승차권 데이터 ((주)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승차권 유효성 검증을 위한 SRT 승차권 데이터 개방 • (개방) SRT 승차권 데이터 확인 서비스 구축, 승차권 승인/취소 현황, 승차권 일별/월별 통계, 승차권 진위 여부 통계 현황 등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T 개방 데이터와 외부 교통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부정승차자 등의 부정행위 사전 방지 효과, 승차권 사용 여부 유무 확인 등 행정감소로 업무처리 비용 절감
생활환경 04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대학 학과별 교과목 정보를 DB화 하여 현행 대학정보 공시센터(대학알리미)를 통해 운영하는 개별대학의 학과 정보와 함께 개방 • (개방) 대학 계열별 학과(전공) 및 개설 대학교 정보, 대학 강의별 교과과정 정보 및 강의계획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별 학과·과목별 커리큘럼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파악 및 처리 가능 ▶ 교육 관련 다양한 수요자에게 핵심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
재난안전 01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판정서 정보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산업재해 피해자의 소속기관 재해 조사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의결한 판정서 개방 • (개방) 업무상 질병 판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질병 판정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산재보상 강화에 기여 ▶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부 행정 업무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재난안전 02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정보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불승인·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 개방 • (개방)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정문 공개로 청구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소송 절차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재난안전 0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경남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별 주요 통학로에 대해 지도기반의 학교 통학로관리시스템 운영 중, 시스템 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정보 개방 •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주요 통학로 보행자 동선, 어린이 보호구역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단속기, 과속방지시설 등) - 학교주변 위험시설물(보차도(보행자·차량통행도로) 미분리, 노상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로 안전정보 개방으로 부모들의 자녀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상시 관리체계 마련 ▶ MMS(모바일매핑시스템), GIS 기반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공공행정 01	대한민국 전자관보 목록 정보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집하여 정기 발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 지인 관보 데이터 개방 • (개방) 입법예고, 국가표준 제·개정, 고위 공무원 인사, 상훈 등의 관보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언론 및 미디어, 정책 분석 및 발굴 분야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 ▶ 정치·사회상이 반영된 역사적인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관보를 데이터 기반의 기록물로 관리

㉔ 정책동향

구분	데이터 (보유기관)	개방 내용	기대효과
공공행정 02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 데이터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매월 집계되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등의 주민등록 관련 통계 자료 개방 • (개방) 주민등록 인구 현황, 주민등록 세대 현황,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 확대로 다른 데이터와 쉽게 매칭·결합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 교육·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기여
자율주행 01	자율주행 실제차량(실차) 운행정보 (한국자동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경기도·대구·울산·경북 등 자율주행 실증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실차(실제 차량) 운행데이터 개방 • (개방) 센서정보(차량 내부, GPS, 카메라 등), 인지정보, 판단 정보, 제어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센서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의 절감을 통해 신규기업 및 개발 진입 장벽 해소 ▶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제반 지식 습득, 차량 운전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자율주행 02	세종시 자율주행 다차원 통합 데이터셋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 데이터 등) (세종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여건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와 도로 인프라 데이터 개방 • (개방) 비식별화된 영상데이터,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Lidar, Radar 등), 자율주행 차량 및 인프라 생성 메시지셋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특화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사업 확장 및 연구개발 비용 절감 ▶ 신산업 기술 표준 지원 및 공정한 경쟁 유도,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확보
스마트시티 01	스마트서비스 (공공자전거, 자동 크린넷) 데이터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디지털트윈 공동연구 관련 공영자전거, 자동크린넷 데이터를 구축하여 세종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데이터 개방 • (개방) 어울링(공공자전거 운영 정보, 자동크린넷 쓰레기 수거정보) 등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트윈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의 스마트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 제고
스마트시티 02	공터 등 공적 공개 공간정보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정보 데이터 개방 • (개방) 위치기반 공적공간정보, 건축선 후퇴정보 등 공개공지 정보(공개공지 건물, 용도, 유형, 조성면적, 도면좌표, 도면이미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공개공지 공간의 활용성 증대* ※ 연간 60일 기간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 가능
헬스케어 01	혈액세포 360도 전방향 홀로그램 및 3D 영상 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기존 R&D 과제결과물로 획득된 홀로그래픽 3D 토모그램 현미경 기반의 3D 영상 정보 개방 • (개방)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홀로그램 이미지, 3D 굴절률 데이터, 토모그래픽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연구자 또는 신생 벤처기업에게 의료 데이터·기술 지원으로, 편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고부가 가치성 신규 의료 비즈니스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헬스케어 02	식중독 균주정보 등 식의약 위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식품안전기본법 및 약사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개방 • (개방) 식중독 균주, 약물 유전자 시약, 한국인 약물 유전정보, 식품위해 정보 등 식의약 안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식중독균 제어기술 개발, 안전 보관방법, 식중독균 검출키트 연구 등에 활용 기대

㉔ 정책동향

구분	데이터 (보유기관)	개방 내용	기대효과
헬스케어 03	국민 체력(운동처방) 동영상 정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국민체력 운동처방 동영상 개방 • (개방) 운동처방 동영상가이드, 체력인증 검사 측정방법,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운동처방 등 동영상 정보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비대면방식 홈 트레이닝 국민 수요 충족 ▶ 비대면 활동 증가 국면에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대국민 운동처방을 통하여 국민 체력 증진에 기여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7.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 2022.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7월 19일,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 15개 참가기업 및 관련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①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 ②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 ③ 친환경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
- ④ 산업·경제·사회 등 전 영역의 탄소중립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

섬·연안 생물자원 식품 산업화 위한 공동협력 추진

자료 : 환경부(2022.7.18.)

- [환경부, 섬·연안 생물자원 식품 산업화 위한 공동협력 추진, 2022.7.18.]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2022년 7월 18일, 섬·연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성공적인 식품 산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
 - (주요 업무협약 내용)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보유 유용성 정보 및 시료 공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시설·장비 활용 시 할인을 적용**

㉔ 정책동향

- ※ (DB 공유) 보유 자원 및 지역별 기능성 자원 목록, 유전자원 정보, (은행구축지원) 시료 및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확보자원 및 정보 건수 지원, 생리활성정보 및 식품 원물시료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 등
- ※※ (활용범위) 공동사용 가능한 모든 시설·장비에 대해 직·간접 활용, (할인율) 식품기업 지원 등 산업화를 위한 장비 활용 시 40% 적용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2022.7.17.)

□ 개요

- [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2022.7.1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7월 15(금)~16(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 7개 세션*을 논의
 - ※ (세션 ①) 세계경제, (세션 ②) 세계보건, (세션 ③) 국제금융체제, (세션 ④) 금융부문, (세션 ⑤) 지속가능금융, (세션 ⑥) 인프라, (세션 ⑦) 국제조세

□ 주요 논의 결과

- [세션 1: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 등으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회복세가 크게 악화**되었다는데 공감, 특히 **전쟁이 수요-공급 불일치, 공급망 차질, 식량·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도 지적
- [세션 2: 세계보건]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2022.6.30일)**한 것을 환영하고, **9월 설립**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WB에 촉구**
 - ※ World Bank 內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며,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 또한, 한국(3천만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
 - ※ (중국) 5천만 달러, (일본) 1천만 달러(초기지원), (이탈리아) 1억 달러, (UAE) 2천만 달러, 미국(4.5억 달러), EU(4.5억 달러), 독일(5천만 유로), 인내(5천만 달러), 영국(25백만 유로), 싱가포르(1천만 달러)는 既발표

㉔ 정책동향

- [세션 3: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
 -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2022년 5월 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이 2022년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
 - ※ RST: 기후변화 등 구조개혁 대응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 [세션 4: 금융이슈] 비은행금융중개(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복원력 제고, 국경 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 [세션 5: 지속가능금융]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축소 등에 대응한다는 G20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가격, 비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인정
- [세션 6: 인프라] 고품질인프라 투자지표(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icator) 논의의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 [세션 7: 국제조세]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

㉕ 추경호 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 [세션 1: 세계경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
 - ①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②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③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
- [세션 2: 세계보건]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WB 이사회의 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하고,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천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 또한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㉔ 정책동향

- [세션 3: 국제금융체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 또한, ②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
 - ※ 우선채권자지위 등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MDB의 자산안정성을 반영하여 MDB의 대출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 제안
- [세션 5: 지속가능금융]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하였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
 - ※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 [세션 7: 국제조세]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리**과 관련하여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
 -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리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

㉕ 평가 및 대응 방향

-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
-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효과**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농업·농촌 동향

식량안보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9.)

- [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2022.7.19.]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 7월 19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를 찾아 회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곡물 선물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도입가격 안정을 당부

※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곡물 유통 기업으로 연간 약 8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취급(2020년 기준)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인도네시아 팜오일 등 주요 해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힘쓰고 있음.

- (주요 내용) 기후변화,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경향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식량 공급망 위기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요 언급 내용〉	
◆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급 여건 개선 및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소비 감소 전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된 만큼, 업계에서도 국내 도입가격이 조속히 안정세를 찾아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
※	국제곡물 선물가격 변화(6월 → 7월, \$/톤): (밀) 371 → 299, (대두) 621 → 584, (옥수수) 299 → 288
◆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급률 제고 노력에 더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의 핵심 유통 시설(곡물 엘리베이터*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혀
※	곡물 엘리베이터(grain elevator)란 곡물을 건조·저장·분류·유통·운송하는 시설로써 산지(產地)나, 강·항만·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
◆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사 7대 핵심 사업으로 식량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중장기적인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향후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국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겠다.” 라고 언급

수확기 중점관리 시·군 중심 공공 인력공급 확대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22.)

- [농식품부, 수확기 중점관리 시·군 중심으로 공공 인력공급 확대 지원, 2022.7.22.]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하여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
- (주요 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인력 공급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원활한 입국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촌 현장에서 공공 인력공급 비중을 확대

〈수확기 농촌 인력수급 지원대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개소*를 선정하고 농촌인력중개,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전체 인력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영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영양, (경남) 창녕, 함양, 함천, 거창 - 비교적 비숙련 단순 작업은 올해 새로 도입한 체류형 영농작업반 및 농촌 일손돕기를 중점 활용하여 도시지역 등 관외 인력을 공급하고, 숙련작업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관내 및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 ◆ 2022년 상반기에 국내 도입이 대폭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 2022년 6월 말 현재 3,720명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 하반기 7,000여 명 도입을 목표로 신속 입국을 추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에 5,452명을 추가로 도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2개소(아산시, 진안군)를 추가 운영할 계획 ※ 2022년 상반기에는 3개소(전북 무주·임실, 충남 부여) 운영 -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발생 동향, 위험요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입국 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 -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 군부대, 농협,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일손 돕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로나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발작물 물가안정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22.)

-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발작물 물가안정 강화, 2022.7.22.] 주요 노지 발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 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㉔ 정책동향

※ ‘채소가격안정제’: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발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①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 또는 과잉물량을 일부 격리, ②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의 조기출하로 가격급등 방지

※ 연도별 시장격리: (2017) 42천 톤(배추, 무) → (2018) 65천 톤(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 (2019) 42천 톤(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 (2020) 71천 톤(배추, 무, 마늘)

- (주요 내용)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 → 15),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 4천 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2022년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7.8)」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 채소가격안정제 정부 재원 부담 비율을 한시 상향(30% → 35) 및 농협 완화(20% → 15) 결정

농림식품신기술(NET) 4건 신규 인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20.)

-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4건 신규 인증, 2022.7.20.] 농식품부는 2022년 7월 20일, ‘식용곰팡이 생육환경 통합 자동 사육시스템’ 등 4개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
 - ※ ① 식용곰팡이 생육환경 통합 자동 사육시스템, ② 입봉기 및 주사식 액체종균 접종기를 활용한 버섯 생산기술, ③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제조를 위한 역유전학 기반 합성 바이러스 약독화 기술, ④ 농업용수 수질 상태에 따른 고속 수처리 기술
 -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 2014년 시행 이후 신기술 인증현황(2022.7.20. 기준): 123건 인증 (53건 유효, 70건 기간만료)
- (주요 내용) △유효기간·**2022년 7월 20일부터 최대 3년**이며, △우대 내용·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기업창업자금 신청 시 농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 △인증된 신기술의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 △**2022년도 하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7월 말에 시행할 예정**

‘산촌관계인구’ 개념 정의 및 대응책 마련

자료 : 산림청(2022.7.22.)

- [산림청, ‘산촌관계인구’ 개념 정의 및 대응책 마련, 2022.7.2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

〈산촌관계인구 정의 및 인구감소 대응책〉	
◆	(관계인구)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1.1. 시행)」에서는 ‘생활인구’ 라는 용어를 활용
◆	(산촌관계인구)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
◆	(산촌관계인구 추산)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 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
-	(관계창출가능 인구)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
-	(관계확대 인구) 「2021 산림복지시설·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
◆	(산촌 인구감소 대응)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산촌관계인구 유형 ■

높음 ↑ 관계성 ↓ 낮음	관계심화 인구 ▶ 지역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및 연계, 지원 ▶ 정기적 후원, 재능 기부 ▶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자문, 지원
	관계확대 인구 ▶ 관광 및 휴양 등을 목적으로 산촌 및 산림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 산촌 특산물 구매 고객(정기적) ▶ 자원봉사자(개인, 단체) ▶ 산촌 살아보기 체험(예비 귀산촌인)
	관계창출가능 인구 ▶ 농산어촌 방문, 거주, 활동에 의향이 있는 자 ▶ 산촌에 직장(근무), 교육, 입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 부재 산주(지역 산림경영, 산림사업에 관심있는 자)
▶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산촌과 무관한 인구	

아젠다발굴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외**

[기획] 트렌드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획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Futures Brief, 7호, 2022.7.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본 연구는 ‘갈등(conflict)’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WoS(Web of Science) DB**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이머징 이슈 검출 알고리즘을 활용**
 - 신규성, 확장성, 파급성을 만족하는 상위 30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헌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이머징 이슈를 구성하였으며, **정치, 사회, 경제, 환경, 국제 관점**에서 **최종 10대 이머징 이슈를 제시**

|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

연번	이머징 이슈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1	탈탄소의 민주주의 시험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전문가 중심주의 한계	갈등 조정 기제, 분권화,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필요
2	삶과 죽음을 조정하는 권력	빠른 결정을 선호하는 정치 권력의 등장과 그 위험성	서툰 정책이 특정 계층의 생존 위협, 명분보다 인간 존엄
3	선택 가족의 등장	서로 돌보지 못하는 가족의 해체 가속화	가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허용, 소외 계층의 돌봄 제고
4	관계 중심의 식량 거래	가격보다 신뢰와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식량안보 전략	식량안보 차원의 종합 점검 및 위기 대비의 방안 마련
5	알고리즘 국가와 디지털 시민	디지털 시민 주도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확대	문제에 실시간 대응하는 정부의 기회와 위협 요인 파악
6	사회적 포용을 위한 공용 텃밭	공동 농장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 정신적 건강도 증대	건강과 사회적 연대를 고양하는 지역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7	트라우마 치유 공간의 부각	생산 중심의 도시가 치유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	정신적 상처 입은 미래세대에게 공간 관점의 치유책 제공
8	쉽과 여가의 재발견	잘 놀았던 추억이 일의 능률 향상에 도움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적정 노동 시간 합의
9	아프리카의 새로운 실험	아프리카가 스스로 부여한 새로운 미래상 실현	사회적 비전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 파악
10	新 디지털 행동주의	기술을 활용해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의 확산	행동주의 디지털 윤리의식, 디지털 난민 지원책 강화

㉔ **아젠다 발굴**

[기획] 디지털 **디지털 및 그린 직업정보**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디지털&그린 직업정보” (2022.7.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디지털&그린 직업정보』를 발간
 - 정보서에 담긴 39개의 직업은 총 120여 개의 디지털·저탄소 관련 직업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
 - ※ 직업 선정기준: ① 디지털 기술 및 지식, 친환경 지식 및 기술 활용 여부, ② 다른 직업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직무 수행, ③ 전문 교육훈련 필요 여부, ④ 향후 일자리 창출 여부, ⑤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독립성

<디지털 직종: 3개 분야 20개 직업>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강화 분야] ‘데이터 과학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비대면 인프라 분야] ‘VR/AR 콘텐츠기획자’ 등 5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하는 직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
- [디지털 융복합 분야] ‘자율주행차기술자’ 등 8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교하고 고도화되는 직업으로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그린 직종: 3개 분야 19개 직업>

-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스마트그린도시기획자’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 ‘친환경선박개발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

㉔ 아젠다 발굴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자원순환) 분야]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자’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미래사회의 견인에 필수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고용증가가 예상

구분	분야	직업명
디지털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중개사(데이터 큐레이터), 인공지능전문가, IT컨설턴트(IT기술경영컨설턴트), 플랫폼 기획자
	비대면 인프라	VR/AR콘텐츠기획자, 실감형 전시체험 기획자, 라이브 커머스크리에이터, 이러닝시스템기획개발자, 서비스로봇개발자
	디지털 융복합	자율주행차 기술자, 메타버스 전문가, 지능형반도체개발자, 스마트팩토리기술자(엔지니어), 블록체인전문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스마트안전관리사, 지능형 교통체계(ITS)전문가
그린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그린도시 기획자, 도시숲조성전문가, 지능형 오염물질 측정장치 개발자, 녹색건축전문가, 환경빅데이터전문가, 생태활동코디네이터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친환경 선박개발자, 미래 자동차전문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문가,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 개발자, 스마트 인프라 플랫폼 구축 전문가, 에너지 분산전원 모집/중개인(가상발전소구축전문가), 디지털트윈전문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자원순환)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자, 에너지관리전문가(EMS전문가), 신에너지전문가(수소연료전지전문가), 재생에너지전문가, 신재생에너지컨설턴트, 에너지저장장치(ESS)전문가

〈디지털 및 그린 직종 정의〉

◆ “디지털 직종” 이란?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요(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 업무 수행 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ICT)과 관련된 지식, 기술 또는 장비를 상당한 정도로 직접 활용하는 직업
- 스마트사회 안착,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전환에 필요한 직업
-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직업
- 국민들이 체감하고 해당 직업의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직업

◆ “그린 직종” 이란?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요(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 대량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저탄소, 친환경 등 미래사회를 위해 점차 필요성이 커지는 직업
- 새로운 시장 및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직업
- 기존에 있던 직업과 업무가 유사하지만 ICT 융합 등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는 직업
- 친환경, 녹색산업 등과 관련하여 향후 새롭게 부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
- 국민들이 체감하고 해당 직업의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직업

㉔ **아젠다 발굴**

이슈 브리프 OECD ESG 투자원칙 제정 동향 및 전망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 ESG 투자원칙 제정 동향 및 전망” (2022.2.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배경>

- 최근 OECD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ESG 투자 기준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파리 협약 이행**,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및 각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ESG 목표 추진 지원을 위해 **OECD ESG 투자원칙**(Principles on ESG investment) 제정을 추진
- OECD 금융기업국(DAF) 및 금융시장위원회(CMF)는 2019년부터 ESG 투자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현행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ESG 투자 지표***들이,
 - ※ MSCI, Bloomberg ESG 현재 등 금융시장 관련 기관에서 투자 기준을 금융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부합할 경우 ESG 투자로 분류
 - 매트릭스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Lack of transparency)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러 지표들 간 연관성 및 호환성** (comparability and interoperability)이 **부족**하여 **동일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ESG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ESG 투자가 실제 탄소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 이에 OECD는 **G20의 지속가능 금융작업반**(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및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긴밀히 **협력**하여 **ESG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 OECD/G20 ESG: 관련 주요 결과물 ESG Investing and Climate Transition: Market Practices,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 The Availability of Data with Which to Monitor and Assess Climate-Related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 특히, G20 SFWG와 FSB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는 OECD가 기후변화 이전 금융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권고 도출을 요청
- 이에 **첫 번째 단계**로 OECD는 **ESG 투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역할**을 할 수 있는 **ESG 투자원칙 제정**을 추진

㉔ **아젠다 발굴**

<OECD ESG 투자원칙의 3가지 축(Pillar)>

- OECD는 ESG 투자원칙의 제정 방향을 위해 크게 3가지 축을 제시
- [Pillar 1] 금융 및 재무정보 관련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ESG 관련 투자 및 재무정보 공개 원칙권고 사항들을 종합하여 원칙에 제시
 - FSB 산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관련한 재무정보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제증권위원회(IOSCO),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서 각기 ESG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들을 종합 정리하여 동 원칙들의 준수를 OECD 차원에서 권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 및 투자자들이 이를 준수토록 유도
 - ※ TCFD, IFRS 등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및 위험요인이 재무지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의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기후변화 이전 관련 정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3의 감사기관(예: 회계법인 등)의 관련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Pillar 2] 현재 활용되는 ESG 지표들 간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ESG 지표 관련 제공 기관 및 정부 규제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ESG 평가 기준을 마련, 특히 지표들 간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매트릭스를 제공
- [Pillar 3] 금융시장이 기후변화 이전으로 인해 받을 영향 및 탄소 절감 기준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 방향 등에 대한 분석 도구 제공
 - 파리 협정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 대상 도구 및 방법론을 제시, 특히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황별 ESG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제시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2월 현재 OECD draft 팀을 구성하고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OECD 사무국 외, 영국,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네덜란드 대표들이 참석 중)
- 2022년 상반기 중 초안을 OECD 회원국에 회람하고 하반기 확정 후 2023년 OECD 각료이사회와 G20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㉔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재해지원프로그램

※ 미국 농무부의 “USDA Has Issued More Than \$4 Billion in Emergency Relief Program Payments to Date” (2022.6.29.)와 “Emergency Relief Program(ERP) Factsheet” 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재해지원프로그램**

- 농무부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67% 이상인 40억 달러를 지급함.
 - 미국 농무부는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을 지원하고자 Emergency Relief Program(이하 ERP)을 통하여 4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음.
 - 또한, 가뭄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Emergency Livestock Relief Program(이하 ELRP)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12만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 재해지원금을 지급함.
 - 작물 보험과 비보험작물프로그램(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이하 NAP)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 수준(crop insurance level)에 따라 ERP 지수를 구성하여 재해지원금을 지급함.
 - (Phase 1) 연방 작물 보험에 가입하거나 NAP에 해당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 (Phase 2) Phase 1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ERP 대상자와 ELRP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금을 지급함.
- Phase 1로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환경에 의한 피해 농가가 포함됨.
 -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로는 산불, 허리케인, 홍수, 데레초(derecho,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폭풍), 고온, 겨울 폭풍, 냉해, 연기 노출, 과습, 가뭄 등과 이와 관련된 기상 환경(related conditions)이 있음.

㉔ **아젠다 발굴**

- 관련된 기상 환경(related conditions)은 재해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로 예를 들어, 데레초로 인한 강풍 피해, 홍수로 인한 부유물 피해, 허리케인 등으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피해,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눈보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됨. 즉 직접적인 재해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형성된 기상 환경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재해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뭄은 U.S. Drought Monitor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뭄 피해 강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됨. **D2(심각한 가뭄, 8주 연속 발생), D3(극한 가뭄) 이상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가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지역(카운티)인지 아닌지는 ER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Phase 1 지원금의 상한은 법적인 총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
 - 농업인, 법인, 합작 투자자(joint venture), 파트너십의 과세 연도 3년간의 평균 조정된 **총 농가소득(average adjusted gross farm income 이하 AGI)의 75% 이하가 농업,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Phase 1과 Phase 2를 합쳐 직간접적으로 특용작물에 대한 지원금을 125,000달러 이상 및 타작물에 대하여 125,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음.**
 - **AGI의 75% 이상이 농업,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 특용작물에 대해 최대 900,000달러,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250,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Phase 1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NAP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최소 2개년의 작물 년도 동안 재해보험 혹은 NAP에 가입해야 함. 재해보험은 보험 보장이 작물의 최소 60% 수준에서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작물들은 NAP를 catastrophic level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가입해야 함.**
 - **지원금을 받는 농가들은 최대 2026년까지 보험 혹은 NAP에 가입해야 함.**

■ 자료 출처:

<https://www.usda.gov/>

㉔ **아젠다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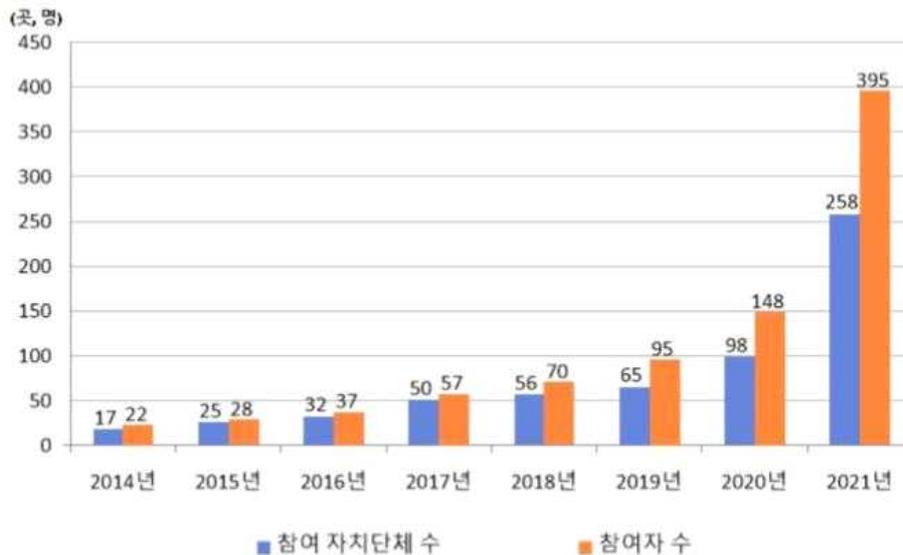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지역 활성화 기업인 증가

※ 일본 총무성 “「地域活性化起業人」の概要” (2022.6.10.), 일본농업신문 “地域起業人が急増 新品目試験’農泊広がる 21年度 総務省” (2022.7.1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지역 활성화 기업인 증가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도에 ‘지역 활성화 기업인(地域活性化起業人)’은 2020년 대비 2.7배 증가한 395명임.
- 지역 활성화 기업인은 기업판 지역 부흥 협력대로 불리는 제도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본 제도를 활용하여 3대 도시권 기업에서 지방으로 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 지역 활성화 기업인 추이 ▮



- 3대 도시권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을 원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정보를 총무성이 정리하여 총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함.
- 각 시정촌은 특산품 개발 및 판로 확대, 디지털화 등 인력 파견을 원하는 업무를 정하고 기업이 사원을 파견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함.
-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감소한 관광 관련 기업은 사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에 따라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㉔ **아젠다 발굴**

- 2021년도 활동 실적 중 농업 분야를 보면,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鹿児島県指宿市)는 청과바이아에서 파견 나온 지역 활성화 기업인과 함께 소비 동향을 토대로 한 새로운 품목 시험 재배를 시작함.
 - 또한, 아오모리현 도와다시(青森県十和田市)는 농박 수용체제를 갖추기 위해 여행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지역 활성화 기업인과 연계하여 농가와 농업체험 실증 실험을 시작하였음.
- 총무성은 ‘자사 상품, 서비스 평가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원을 현장에 파견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으며, 자치단체는 기업 인재의 노하우를 과제해결에 활용 가능하다’ 고 밝힘.
- 지역 활성화 기업인 파견에 필요한 비용, 발안 사업 추진 경비, 지자체 홍보비 등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함.

지역 활성화 기업인(기업 인재 파견 제도) 개요
<p>◆ 지방공공단체가 3대 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에 있는 민간기업 등의 사원을 일정 기간 수용하여 노하우 및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매력 및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업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응에 대해 특별 교부세 조치를 시행함.</p> <p>◆ (대상자) 3대 도시권에 있는 기업 등의 사원(파견)</p> <p>◆ (참여 단체) ① 3대 도시권 이외 시정촌(기초자치단체), ② 3대 도시권 내 시정촌 중 조건 불리 지역이 포함된 시정촌, 정주자립권* 시정촌 및 인구감소율이 높은 시정촌 → 1,432개 시정촌</p> <p>※ 전국 각 지역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중심시와 근린 시정촌이 의료, 교육, 산업진흥, 지역 교통 등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지방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각지에 형성, 지방권에서 3대 도시권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3대 도시권 주민도 라이프 스타일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거주 옵션을 제공하여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창출</p> <p>◆ (활동 예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활동에 종사</p> <p>- △관광 진흥, △지역상품 개발·판로 확대, △ICT 분야(디지털 인재), △지역 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등</p> <p>◆ (특별교부세 조치) △파견 기업의 부담금 등 기업인 수입에 필요한 경비 상한 연간 560만 엔/명, △기업인 발안·제안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상한 연간 100만 엔/명, △기업인 수용 준비 경비* 상한 연간 100만 엔/단체</p> <p>※ 파견 기업에 모집·PR, 협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p> <p>◆ (기간) 6개월~3년</p>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89682>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bunken_kaikaku/02gyosei08_03100070.html

㉔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농업 속 ESG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농업 속 ESG 주요 동향

-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국들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협력
 -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ESG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
 - 우리나라 역시 ESG의 표준화 등을 위해 2021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 의무를 강화
- 농업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
- 또한,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ESG 틀 안에서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먼저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 지원정책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 등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 ※ '탄소배출거래제도':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농업 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과 기술인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선택권을 제공

㉔ **아젠다 발굴**

- 한편, **ESG 경영 가속화**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교육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는 **사회적 농업***도 다시금 주목
 - ※ ‘사회적 농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농업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꾀하고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을 의미
- 선진국의 경우 **농업과 복지 정책당국이 협력해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고, 관련 **법을 제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의 경우 1,000개가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는데 네덜란드의 농업 관련 대학들은 케어팜을 접목한 학위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
- 이와 함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등으로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
 - **농기계 기업 TYM**은 2021년 2월 농기계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사내 ESG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해 장기적인 **ESG 비전**을 **수립**해 실천
 - **군위축협**의 경우 2021년 10월 경북지역 농·축협 최초로 **선제적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부패방지 경영**의 **안착**을 **도모**
- 국내 농업 혁신기업 **그린랩스(Green Labs)**는 세계 다자간 협의체인 세계 다자간 협의체인 **‘글로벌 지속가능한 소고기 협의체’ (GRSB*)**에 **가입**했다고 2022년 7월 19일 밝혔으며, 아시아 기업이 GRSB에 가입한 것은 처음
 - ※ GRSB: 글로벌 소고기 가치 사슬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2012년 출범한 협의체. 소고기 생산의 탄소배출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소고기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량 30% 감축을 목표로 삼는 등 이 분야에서 ESG를 논의하는 단체
 - ※ GRSB에는 월마트, 카길,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각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회 등 24개국 500개 이상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고기 거래량에서 GRSB 회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함.
- 그린랩스는 GRSB 가입을 통해 국내와 아시아 협의체 설립에 앞장서고, **국내외 축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ESG 소고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저메탄사료*’**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 이와 관련, 사료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 한국지사가 개발한 ‘저메탄사료’를 벽제갈비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식품기업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디지털 농업기술과 연계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 저탄소 축산물 시장 개척 등 친환경 농축산업 활성화를 추진

㉔ **아젠다 발굴**

-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축산환경 분야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2021년 1월 ESG 전략팀***을 신설해 내부적으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외부적으로 산업계에 ESG 경영을 전파
 - ※ (ESG 전략팀 임무) 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이용 다변화,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 중, ③ 경영의 투명성, 반부패, 청렴 등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레드휘슬(익명신고) 제도 등의 운영
- 농업계는 ESG 경영의 원칙으로 돌아가 내가 만들고 있는 문제(메탄가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기술과 농법이 개선될 필요**
 - 이에 농업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화된 농법과 가축 사육, 기술도입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 아울러,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윤리적·가치적 소비 경향**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품격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농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ESG 경영 시대는 국내 농식품기업과 산업에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 따라서 빠르게 **ESG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위협요인은 줄이면서 **기회요인**을 극대화 하는 전략마련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생산자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제품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기후환경**에 있어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상생의 분위기**로 산업을 영위해 나갈 필요

자료: “축산환경 분야의 ESG 경영체계 구축, 축산환경관리원을 시작으로” (한국농어민신문, 2022.5.17.), “[ESG 기획특집]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 경영 (2) 농업계, ESG 경영에 관심 가져야” (농수축산신문, 2022.7.15.), “그린랩스, 亞 최초 GRSB 가입…국내 ‘ESG 소고기’ 선도한다” (아시아경제, 2022.7.19.), “농업 혁신기업 그린랩스, ‘ESG 소고기’ 국제협약체 가입” (연합뉴스, 2022.7.19.), ““쇠고기도 ESG” …그린랩스 아시아 최초 GRSB 가입” (농축유통신문, 2022.7.20.)

통계·조사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2.7.20.)

☐ 개요

- [통계청,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2.7.20.]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 (조사대상 및 시기) 보리 519개, 마늘 536개, 양파 367개 / 보리: 수확 직후(6월 중순~7월 상순), 마늘·양파: 수확기(5월 중순~6월 하순)

☐ 조사 결과

- [2022년 보리 생산량] 9만 8,836톤*, 전년 대비 3만 31톤(-23.3%) 감소
 - ※ (2016) 107,812톤 → (2017) 109,727 → (2018) 151,401 → (2019) 200,003 → (2020) 143,669 → (2021) 128,867
 - (원인) 가뭄의 영향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10a당 생산량이 6.5% 감소하였으며, 재배면적이 18.0%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3% 감소
 - (시도별) 전북(4만 2,785톤, 전체 생산량의 43.3% 차지) > 전남 3만 6,634톤(37.1%) > 경남 8,323톤(8.4%) 순
- [2022년 보리 재배면적] 2만 3,639ha, 전년(2만 8,823ha) 대비 18.0% 감소
 - (원인) 계약 수매가격 약세와 밀 등 타작물 전환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 [2022년 보리 10a당 생산량] 418kg, 전년(447kg) 대비 6.5% 감소
 - (원인) 봄철 긴 가뭄으로 인한 생육저하 등으로 10a당 생산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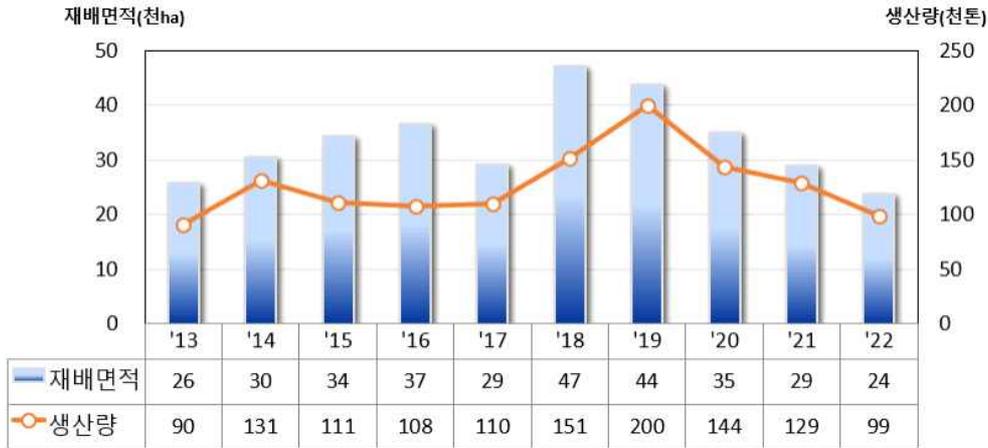
■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보리	28,823	23,639	-18.0	447	418	-6.5	128,867	98,836	-23.3
겉보리	5,783	4,620	-20.1	495	456	-8.0	28,620	21,048	-26.5
쌀보리	15,865	12,979	-18.2	450	428	-4.8	71,333	55,546	-22.1
맥주보리	7,175	6,040	-15.8	403	368	-8.6	28,913	22,242	-23.1

※ 생산량은 조곡 기준

㉔ 통계·조사

▮ 연도별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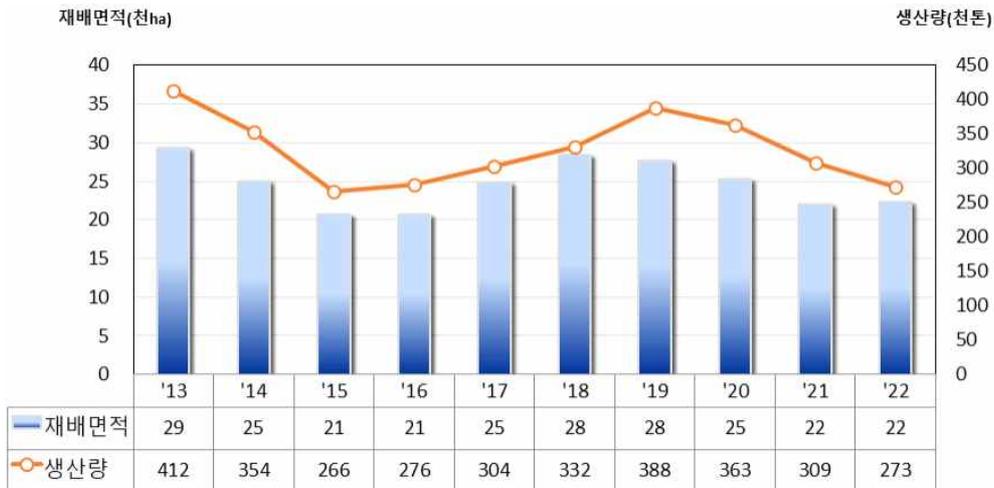
- [2022년 마늘 생산량] 27만 2,759톤*, 전년 대비 3만 5,773톤(-11.6%) 감소
 - ※ (2016) 275,549톤 → (2017) 303,578 → (2018) 331,741 → (2019) 387,671 → (2020) 363,432 → (2021) 308,532톤
 - (원인)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1.6%)하였지만,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이 13.0% 감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
 - (시도별) 경남(7만 8,547톤, 전체 생산량의 28.8% 차지) > 경북 6만 2,262톤(22.8%) > 전남 4만 2,828톤(15.7%) 순
- [2022년 마늘 재배면적] 2만 2,362ha, 전년(2만 1,999ha) 대비 1.6% 증가
 - (원인) 전년 마늘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 마늘 도매가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6,011원 → (2017) 6,087 → (2018) 5,551 → (2019) 4,255 → (2020) 3,767 → (2021) 5,962 → (2022) 6,871(15.2%)
- [2022년 마늘 10a당 생산량] 1,220kg, 전년(1,402kg) 대비 13.0% 감소
 - (원인) 월동기 기온 저하로 결주 발생 및 가뭄 등 피해 발생이 증가하였고, 알이 쪼개지는 시기(4-5월)에 강수량 부족, 과도한 일조량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10a당 생산량 감소

▮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마늘	21,999	22,362	1.6	1,402	1,220	-13.0	308,532	272,759	-11.6
한지형	5,420	4,462	-17.7	1,060	849	-19.9	57,446	37,880	-34.1
난지형	16,579	17,900	8.0	1,514	1,312	-13.4	251,086	234,880	-6.5

㉔ 통계·조사

■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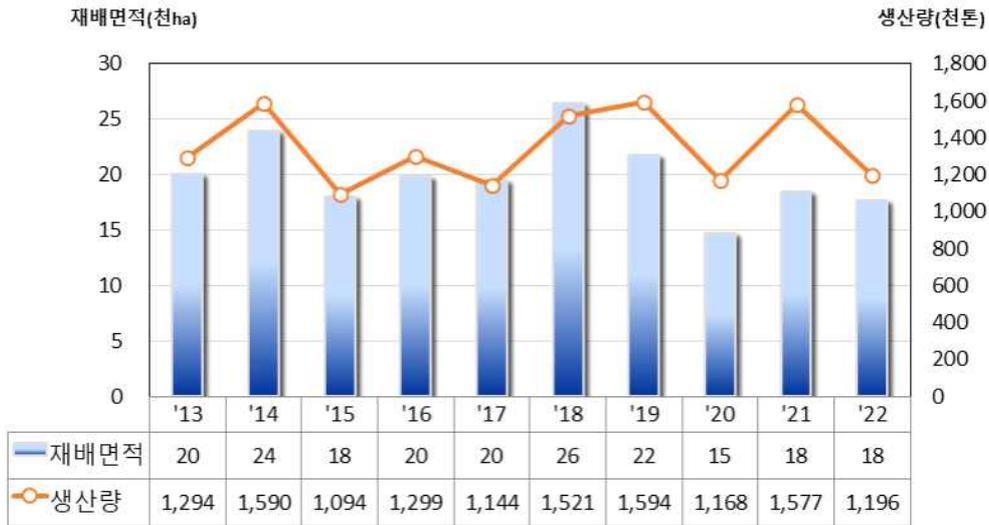
- [2022년 양파 생산량 119만 5,563톤*, 전년 대비 38만 1,189톤(-24.2%) 감소]
 - ※ (2016) 1,298,749톤 → (2017) 1,144,493 → (2018) 1,520,969 → (2019) 1,594,450 → (2020) 1,168,227 → (2021) 1,576,752
 - (원인)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 20.7% 감소, 재배면적 4.3% 감소하여 생산량도 24.2% 감소
 - (시도별) 전남(46만 8,234톤, 전체 생산량의 39.2% 차지) > 경남 23만 7,057톤 (19.8%) > 경북 20만 8,970톤(17.5%) 순
- [2022년 양파 재배면적 1만 7,661ha, 전년(1만 8,461ha) 대비 4.3% 감소]
 - (원인) 전년 2분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진 영향 등으로 감소
 - ※ 양파 정식기(10~12월) 평균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2018) 693원 → (2019) 625원 → (2020) 1,277원 → (2021) 952원(-25.5%)
- [2022년 양파 10a당 생산량 6,770kg, 전년(8,541kg) 대비 20.7% 감소]
 - (원인) 가뭄 등 피해 발생 증가로 개당 생중량 감소 및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하여 10a당 생산량 감소

■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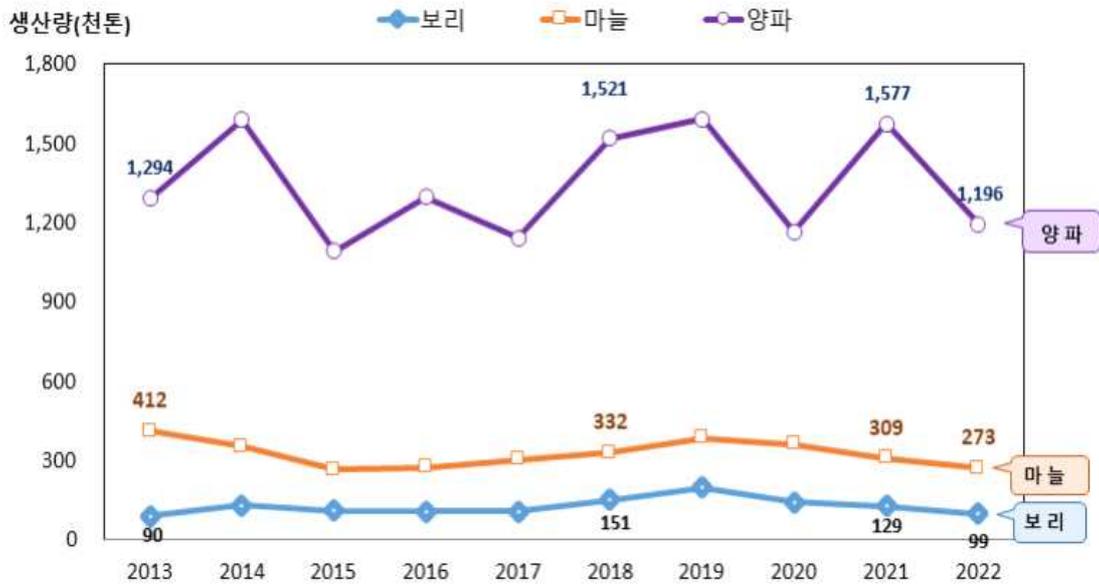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양파	18,461	17,661	-4.3	8,541	6,770	-20.7	1,576,752	1,195,563	-24.2
조생종	2,151	2,142	-0.4	8,387	7,170	-14.5	180,404	153,606	-14.9
중만생종	16,311	15,519	-4.9	8,561	6,714	-21.6	1,396,347	1,041,958	-25.4

㉔ 통계·조사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연도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추이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